

# 우리 나라 가상대학의 현황과 문제

황 승 연 경희대 사회과학부 교수

## 1. 서 론

교육부에 의해 가상대학 시범 및 실험기관이 선정되어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나라 가상대학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봄과 동시에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일은 가상대학이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뜻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관련한 원격교육과 가상대학의 의미와 역사적 당위성,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담고있는 교육학적 첨단논리, 미국 등 선진국의 가상대학의 소개는 이미 최근 몇 년 동안 저널의 지면과 세미나 등을 통하여 술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원격교육을 소개하고 첨단방법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나라의 대학에서 원격교육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교수는 소수에 불과했다. 즉, 새로운 경기종목에 선수는 몇 명밖에 되지 않는데 코치와 감독은 몇십 명인 경우와 흡사했다. 더욱이 교육부에서는 선수경험은 없고 이론으로만 무장된 코치와 감독들과 함께 이 종목의 육성을 위하여 시범 및 실험학교를 선정하였다. 교육부의 줄 세우기 논리에 전국 74개 대학이 가상대학을 한다고 덤벼들었다. 정보통

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 혹은 가상대학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다. 그러나 본질은 잊고 우리도 가상대학을 할 수 있다는 걸치레만 남아 혼란과 시행착오 속에 빠져 있다.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해 본다.

## 2. 우리 나라 가상대학의 역사

시 작 가상대학은 원격교육의 하위개념 중 하나이다. 가상대학은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을 기술적 기반으로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우리 나라 원격교육의 효시는 1995년 3월 필자가 '정보사회론'이라는 과목을 상용 컴퓨터통신망의 하나인 천리안을 통하여 실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이어 전남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원격수업이 시범적으로 몇 과목 실시되었고 이것은 당시 언론사들의 정보화 캠페인에 자극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필자의 '정보사회론' 수업은 필자의 재직학교가 서울과 수원으로 이원화된 캠퍼스 체제를 갖고 있어서 물리적인 거리와 공간의 제약을 극복

하고 서울과 수원캠퍼스 학생들을 같은 수업에 동시에 참여시키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이 사실이 언론에서 '21세기형 첨단 수업방식'이라고 과장되어 보도되고 난 후 많은 학교들은 홍보효과를 위하여 혹은 '대학종합평가'나 '교육개혁 평가', '정보화 평가' 등의 각종 평가에서 정보기술의 도입을 과시하기 위하여 원격수업을 정책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실상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공간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전자우편을 통한 과제물의 제출이나 질문 답변을 주고받는 수업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는 수준이었다. 1995~1996년에는 컴퓨터 보급률이 아직 그리 높지 않았고 대학들의 전산 설비도 빈약하거나 네트워크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 때는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탐색하는 시기였다.

**확 산** 1996년과 1997년은 21세기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는 인터넷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경쟁적으로 소개되면서 우리 나라에도 이의 활용이 유행처럼 확산되었다. 이에 힘입어서 컴퓨터 통신의 활용도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였던 시기이다. 이 시점에서 이미 실험적으로 시작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있던 컴퓨터 통신망을 사용한 원격수업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학교에 오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편리한 시간에 수업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수업방법에 대한 언론 특유의 찬사는 여러 다른 학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여러 학교로 확산되었다. 이에 감독기관으로서의 교육부는 이 수업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1주일에 3시간, 16주의 수업을 3학점 한 강좌로 인정하는 수업에 관한 시행령에 의한다면 원격수업은 이 기준에 적합한 수업의 형태가 아니었다. 당시 각 대학의 수업에 대한 규정도 이러한 수업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것이어서 수업 행정담당 직원들과 수업주체로서의 해당 교수와는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었고, 수업을 담당하는 대학의 직원들은 교육부의 해명요구에 곤란을 겪었다. 또 교육부는 수업과 학점에 관한 시행령에 어긋나는 원격수업 관련 학칙을 정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나 언론의 지속적인 정보화 캠페인과 정보화를 부르짖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러한 수업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법적 근거를 찾기 시작하였다. 결국 교육부는 방송통신대학 시행령의 확대 해석을 통하여 즉, '방송통신대학'을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로 해석하고 일반 대학들도 방송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광의의 해석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는 동안에 상용 컴퓨터 통신망인 천리안에 1995년 12월 '온라인 통신학교'가 생겨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 플랫폼을 통하여 학교소개나 수업관련 사항을 공지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이를 활용하는 학교들은 그 후 2년 만에 전문대학 및 대학 104개교를 포함하여 318개교로 확대되었다. 이 후 역시 상용통신망인 하이텔, 나우누리 등을 비롯하여 후발업체인 유니텔도 유사한 포럼을 개설하여 수업뿐 아니라 학교의 홍보, 소개, 학교와 학생 간의 혹은 학생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또한 컴퓨터통신 인구의 급격한 성장 시기와 겹치면서 원격수업과 네트워크 활용도는 서로 상승작용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불었던 인터넷 바람과 이를 부추긴 언론기관들의 영향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인식과 기반은 짧은 기간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제도화의 시도** 원격교육이 필자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을 때 교육부와 대학당국은 수업에 대한 기존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여 자칫 수강생들이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뻔하였다. 따라서 원격수업에 대한 제도화는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이에 교육개혁위원회는 '원격교육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교육개혁 과제에 포함시키고,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1996년 '가상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 가상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국회 차원의 '가상교육법' 입법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라는 시각도 있었다. 당시 신한국당의 이상희 의원에 의해 추진된 이 법안은 교육적 차원에서 21세기 정보사회를 대비할 전략을 마련한다는 취지 이외에 해외 가상대학들의 국내 진출에 대비하고 과외과외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제시된 것으로 교육부보다 먼저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후 교육부에서는 가칭 '가상교육법(안)'을 제시하고 우선 가상대학 시범대학을 선정하여 이를 2년간 시험 운영하게 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가상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주무 부서로서의 교육부가 가상대학 시범운영이라는 실질적인 과정을 내세움으로써 국회 차원의 '가상교육법'은 일단 뒤로 밀리고 만다. 이리하여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원격수업과 가상대학이 점차 퇴색하고,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상대학이 되고 말았다. 또 이를 위해 사용된 모델이나 이론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아직도 제한적으로 실험중인 주로 미국의 사례들로서 우리 나라의 가상대학은 출범부터 적지 않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가상대학 시범기관 선정** 1997년 10월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과제로서 '98 가상대학 프로그램 시범운영대학 선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학습자들의 다양하고 탄력적인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설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뛰어 넘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학교개념을 도입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일정기간 가상대학을 시범 운영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가상대학 설립에 관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일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종합평가, 교육부의 '교육개혁평가', 언론사들의 '정보화 평가'와 '학과평가' 등의 많은 평가들이 대학들의 경쟁을 참여화시키는 시기에 이루어졌고, 교육부 역시 이의 결과를 대학 평가에서 정보화 평가 부문에 반영하며 정보화 관련 예산 지원시 우선 고려한다는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원격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혹은 가상대학에 대한 지식의 유무 혹은 실질적인 추진 의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모두 가상대학을 하겠다고 신청에 나서는 희극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는 원격수업을 하고자 하는 교수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고 학교 당국에서 시범학교에 속할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오로지 어떤 종류의 선발이라도 그것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맹목적인 지시에 의하여 준비된 것으로서, 여러 가지 기반여건을 감안할 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처음부터 자명한 일이었다.

또 타대학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마치 선정에 유리한 것으로 이해되어 각 대학들이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가상대학 시범기관의 선정사업이 과열되도록 한 또 다른 요인은 언론사들의 개입이다. 인터넷이라는 상품성을 높이 평가하여 인터넷이라는 용어의 선점을 통한 사세의 확장을 꾀한 몇몇 언론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가 갖게 되는 새로운 영역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더 나아가 언론사 독자적으로 혹은 동일 계열 정보통신 회사와 손잡고 교육시장에 뛰어 들려는 노력도 보였다. 이렇게 언론사가 가상대학 시범기관 선정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거나 특정 컨소시엄을 지원함으로써 그 경쟁이 증폭되었다.

이 경쟁은 결국 1998년 2월, 5개의 가상대학 시범운영기관과 10개의 실험운영기관이 선정됨으로써 끝나고, 단독 8개교, 컨소시엄 참여학교 53개교 등 총 61개교가 선정되었으며, 이 숫자는 현재 74개로 늘어 '99년 3월 현재 3학기제를 맞아 여러 가지 형태로 가상대학이

시행되고 있다.

**가상대학 시범기관 선정의 문제점** 그러나 이들 시범 혹은 실험기관들의 가상대학 시행과정을 살펴보면 이 기관들이 가상대학의 목적에 맞게 바르게 운영되어 가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 첫째는 교육부에서 가상대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시범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이 결과 원격수업을 자발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대학에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또, 새롭게 가상대학을 시도하려는 대학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데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도달하고 만다.

가상대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는 아직 가상대학에 대한 명확한 모델이 없어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또 자발적으로 생겨나서 스스로 시행착오를 수정해 가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상대학 시도가 있을 수 있음에도, 시범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일정한 규정 속에 묶음으로써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 창의적인 시도를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산업화시대의 잣대로 정보화시대를 규정하는, 다소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발상이라 생각한다. 이 점에서 가상대학의 시도를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서 시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기술과 그 기술의 사용은 분야를 막론하고 앞서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뒤따라 다니며,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이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그 한계를 드러내고 탁상공론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상대학 시범기관 선정기준에는 '타기관(대학, 연구소, 민간업체)과의 연계', '학생등록금 책정 수준', '가상대학 교사 확보', '가상대학 전임교원 확보' 등의 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왜 타기관과 연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배점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는 대학에 재학생인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책정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 사회교육원 학생들의 수강료 이외에는 가상대학이라는 이름을 걸고 등록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학생등록금 책정 수준'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인력과 시설 및 교육자료를 이용한 가상대학의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면서 가상대학 교사(건물)확보와 실체도 없는 가상대학의 전임교원 확보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들은 몇몇 교수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실험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원격수업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원격수업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가상대학은 자연스럽게 못하게 출범하였다.

### 3. 가상대학의 현황

현재 15개 시범 및 실험운영기관(단독 8개 대학, 컨소시엄 7개 기관)의 74개교가 가상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일부의 교육과정을 가상공간에서 실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이미 강의실 수업으로 해오고 있던 교육과정의 일부를 웹 기반의 온라인 강좌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극히 일부의 대학에서 일반인 대상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참여대학들간의 학점 상호인정제 속에서 운영하고 있다. '98년 첫 학기에는 41개 대학에서 256개 강좌를 개설하여 총 16,721명이 수강하였고, '98년 2학기에는 536개의 강좌로 늘어 약 45,000여 명이 수강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수업의 수준과 질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것은 외국의 가상대학들이 평생교육이나 재교육 대상자를 목표로 수준 높은 실용지식의 전수를 위해 가상대학을 운영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표) 가상대학의 현황과 특징

가상대학 운영	참 여 대 학	운영기관 형태	지원 업체 및 기관	특 징
영진전문대	단독운영	실험운영기관		
한반도 가상대학	송실대, 서울여대, 인제대, 한림대, 금오공대	실험운영기관	LG-EDS	주문형 강의(LOD) 개발
동국대	단독운영	실험운영기관		사이버 창작과정 전문화
한국가상대학 연합	경북대, 경희대, 경성대, 광운대, 대구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국방송대, 한양대	실험운영기관	데이콤	회원교 학점상호인정 협정, 전국의 한국방송대 지역학습관 활용, 가상대학 평생교육원 개원예정
서강대	단독운영	실험운영기관		
경성대	단독운영	실험운영기관		
한국온라인 가상대학	중앙대, 경기대, 대전산업대, 공주전문대	실험운영기관	나우콤	외식산업 경영자과정, 정보분야 독학사 학위취득과정, 안화예술 창작과정 개설예정
충남대	단독운영	실험운영기관		
한국대학 가상교육연합	연세대, 강원대, 경북대, 경남대, 건국대, 계명대, 아주대, 영남대 등 23개 대학	실험운영기관	SK텔레콤 디지털 조선일보	위성통신 강좌 개설
한국외대	단독운영	실험운영기관		
부울가상대	동명정보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시험운영기관	부산시, 울산시 및 시 교육청	일반강좌 및 시도교육청과 관련기관 공무원 강좌, 지역특성화 교과과정 강화
열린 사이버대학	성균관대, 고려대, 공주대, 충북대, 제주대, 성신여대 등 11개 대학	시험운영기관	삼성 SDS 중앙일보	건강, 바둑, 아동 수지침 등 공개강좌 확대 예정, 대국민 인터넷 통신교육과정 개설
숙명여대	단독운영	시험운영기관		음악치료, 임상약학, 영어전문교사양성과정 개설
서울 사이버 디자인대학	홍익대, 국민대	시험운영기관	삼보컴퓨터	컴퓨터그래픽, 공업디자인, 웹디자인 등 디자인 강좌 전문화, 각종 자격증과정 개설 예정
서울대	단독운영	시험운영기관		기존수업 보완용

가상대학의 4대 요소인 가르칠 사람, 배울 사람, 교육내용, 전달매체가 다 갖춰져 있고 이 4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 효용성을 필요로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가상대학에 대한 어떤 틀을 정해, 그 틀에 맞는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등수를 정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율적이고 열린 방식을 통해서만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15개 기관들 중 일부는 1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대학의 기존 교육과정이 포함하지 못하는 특별한 교육과정들을 개발해 내고 있고,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을 교육대상으로 삼는 정책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표 참조).

#### 4. 문제점

현재 우리 나라 가상대학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문화적 문제, 제도적 문제, 기술적 문제로 나눌 수 있겠다. 우선 문화적 문제는 우리 나라 대학에서 면학 분위기가 가상대학을 운영할 정도로 성숙되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업에 대한 학생들의 성숙함이 담보되지 않으면 가상대학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화적 기반이 우리 나라에는 대단히 부족하다. 따라서 그나마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전문인력(고급 자격증 소지자들 - 예를 들어 교

사,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에 대한 재교육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현재 숙명여대 가상캠퍼스에서 시도하고 있는 재교육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올바른 시도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시도가 교육과정의 특성화로 발전되어 순발력 있게 실시되려면 컨소시엄의 결속이 오히려 장애물로 등장할 수 있다. 또, 가상대학의 성공요인으로 피교육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첫째로 꼽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지식정보 기반사회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이해가 확산되어 있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요인이다. 공부하지 않는 대학, 공부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모두 부질 없는 시도일 수 있다.

현재 국내 가상대학들의 운영 유형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교육과정을 가상공간에서 개설하는 초보단계의 유형이 대부분이고, 몇몇 기관에서만 가상대학을 위해 별도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별 교육과정이 대학의 학점과 연계되려면 학점은은행제나 시간제등록제에 의해 실시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과목들이 기존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혹은 과목을 교육부로부터 특별히 인가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학점취득에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 때문에 가상대학의 운영이 현 체제 내에서 좀더 유연하게 운영되거나 현행제도에 지배받지 않는 가상대학을 별도로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학점 부여를 대학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교수, 학생, 교육내용, 전달매체라는 가상대학의 4대 요소가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이를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제도적 경직성은 가상대학의 발전을 막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다는 가상대학의 장점은, 공간의 제약 때문에 한정해야 하는 수강생들의 숫자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한 강의의 수강생이 몇백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때 교수의 입장에서 한 강의는 주당 강의시간이라는 단위가 아니라 교수에게 돌봄을 받는 수강생의 숫자가 그 단위

가 되어야 한다. 산업화시대의 효율적인 수업방식이었던 주입식 대중교육은 점차 사라지고 이제 정보화시대에는 자율학습, 개별학습 등이 일반적인 수업방식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 때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대단히 중요한 수업요소가 되는데 교수의 업무는 학생과 나누는 상호작용의 시간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 산업화시대의 수업에 대한 기준으로 정보화시대의 수업을 평가하려는 시도는 가상대학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또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가상대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

기술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네트워크의 속도이다. 웹 기반학습(WBI)이 현재 대부분의 가상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학습방식인데 주로 교수가 만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학생들이 다운 받아서 자습하고 이에 대한 질문을 전자메일로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동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학습이 된다고들 한다. 그러나 쌍방향까지는 아니라도 현재 학습자료를 다운 받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의 컴퓨터 네트워크의 속도는 아직 가상대학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고 수년 내에 개선될 것 같지도 않다. 또, '초고속정보통신망' 추진사업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ATM방식은 음성정보전송용으로 개발된 것이어서 인터넷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다. 이 분야의 기술적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교육내용의 멀티미디어 제작도구가 정책담당자들의 이해 부족 또는 가격문제로 거의 보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작도구를 교수 개인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 5. 과제와 전망

가상대학의 4대 요소로서 언급한 교수, 학생, 교육내용, 전달매체를 가상대학의 성공조건과 관련하여 설명하

면 성의 있는 교수, 적합한 대상, 알찬 교육내용, 효율적인 방법이다. 성의 있는 교수를 만들기 위해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들의 수고를 적절히 평가하는, 산업화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업적평가 기준이 마련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업에 대한 새롭고 폭 넓은 규정이 필요하다. 학생에 대해서는, 가상대학이 아니면 수업의 참여가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갈망하는 대상이 발굴되어야 한다. 그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교육내용이 준비될 때 가상대학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식기반 산업을 선도하는 고급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정보화시대에는 국제적인 범위에서 통용되는 실용적인 기술과 지식의 습득이 명확히 목표로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수업내용만이 환영받게 될 것이다. 졸업장 취득을 위한 학업자세는 가상대학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수업내용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네트워크의 속도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아직 충분하지 않은 네트워크 속도를 염두에 둔다면 아직은 텍스트 기반의 토론식 수업이 적합할 것이고, 점차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전국적 완성도가 높아지면 쌍방향 멀티미디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 기반이 제공해주는 데 따르는 적합한 효율적인 수업 방식들을 발견해 내어야 한다. 이것의 균형이 깨어지면 대단히 불편한 수업이 되고 만다.

가상대학이 정보사회의 대안적인 교육이 될 수는 없다. 그저 여러 교육방법의 한 형태로 자리잡을 것이고 이는 가상대학의 특징에 적합한 교육분야에서 적절히 행할 때 그 가능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어차피 캠퍼스에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상공간에서 수업을 해보라는 실험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다. 가상공간에서 수업을 해야 할 적절한 사정이 있는 수업에 한하여 또 가상공간을

통한 수업이 더 많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본격적인 가상대학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가상대학은 전문인력 재교육, 특수교육, 위탁교육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때에 한하여 평생교육원과 사회교육원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가상대학의 장점을 살리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더불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마련되지 않고 늦어지면 본질은 없고 이름만 존재하는 가상대학으로 좌초하고 말 것이다. 모든 규제를 없애고 대학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가상대학의 발전의 지름길이 아닐까? **김진**

#### 〈참고문헌〉

- 김재웅·황대준, 가상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공청회, 교육행정연수원, 1997년 6월.  
 하라심, 「글로벌 네트워크」, 황승연 외 공역.  
 한국가상대학연합, 「가상대학 시범학교 지원신청서」, 1997년 12월.  
 황대준, 「가상대학의 현황과 발전방향」, 『정보과학회지』 제113호, 1998년 10월.  
 황승연, 「정보사회의 교육혁신」, 『정보사회의 이해』(개정판), 황승연 외 공저, 1998년.

#### 황승연

경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자이브뤼켄 대학에서 사회변동을 전공하여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현재 정보사회연구소장, 신문방송국장,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정책 자문위원,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기획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정보사회의 이해』(공저), 『네트워크 트렌드』(공저), 『글로벌 네트워크』(공역) 등이 있다.